

民族主義의 形成과 展開過程에 관한 一考

全 相 仁*

▷ 目 次 ▷

- | | |
|----------------|-----------------|
| I. 序 論 | III. 民族主義와 世界體系 |
| II. 民族主義와 國民國家 | IV. 結 論 |

“역사란 우연 투성이이다.”

—Samuel Eliot Morison—

I. 序 論

민족주의 ‘문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 까닭의 단초로서 무엇보다도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체계의 대변혁 혹은 世界史의 대전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생산 및 분배의 국제화와 경제단위의 블럭화는 탈냉전 시대 신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는 듯한 인상은 민족주의 시대 ‘이후’를 예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주의가 물락한 자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민족주의 운동은 오히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2 統一研究論叢

려 민족주의의 강화 추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와 아울러 냉전의 강도가 약화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보다 현실감있게 논의되는 마당에서, 민족주의는 남북한 양쪽에서 통일이념으로서 새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¹⁾

이 글의 목적은 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을 역사 정치경제학적 (historical political-economy) 관점에서 개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의 개념이나 유형 논의 등에 관련된 이론적이고도 정태적인 분석을 유보하는 대신,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적 형성 및 전개과정에 매개되어 있는 사회적 행위자(actors)와 그들간의 갈등구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민족주의의 구체적이고도 동태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향은 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를 匿名 혹은 無名의 내재적인 역사과정으로 파악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규범이나 가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이자 사회운동이며, 따라서 민족주의의 내용과 성격 및 방향도 시대와 공간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족주의로 부터 얻게 되는 損益(cost and benefit)이 서로 같지 않을 행위자들간의 역학관계인 것이다.

민족주의 운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은 우선 대내적인 차원에서 국민국가(national state)의 역사적 형성과 확립, 그리고 대외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 세계체계(world system)에 관련된 민족주의의 위상과 역할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민족주의 운동과 국민국가의 건설은 경험적으로 不可分의 친화력을 가져왔다. 한편 민족주의와 세계체계는 서로 愛憎의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는 작금의 세계체계를 형성한 원동력이었으나,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세

1)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1993.4.8. 타워호텔), 제36회 전국역사학대회는 “근대국민국가와 민족문제”를 공동주제로 걸었다 (1993.5.21~22, 한양대학교).

계체계간에 존재하는 기본적 모순과 긴장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글의 제2장은 국민국가 건설에 관련된 민족주의 운동을 다루고, 제3장은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본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단계에서의 민족주의의 위상과 그 향후를 전망한다.

II. 民族主義와 國民國家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의 태동이 우연한 사건이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²⁾ 민족주의가 어떤 자연적인 속성이나 보편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直觀의 오류일 뿐이다. 지난 두어 世紀 동안 인류가 민족주의의 시대를 살아온 것에는 아무런 당위적·필연적 이유가 없다. 인류는 과거 수천년을 민족주의 없이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인종적, 문화적, 심리적, 영토적 혹은 경제적 유대 등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개념화하는 일반적인 태도에는 민족주의의 기원을 아주 먼 과거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민족(nation)을 빚어내는 재료로서, ‘先民族’ 또는 ‘原民族’의 개념이 더 잘 어울리는 것이다. 민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일반 민중을 공통의 정치적 형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다.³⁾ 다시 말해 민족의 형성은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기서 정치적 차원이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독자적인 국가를 이루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서양사 중심의 세계사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불가피하다. 물론 민족주의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동양사회에서 없었을

2) 어네스트 젤너(Ernest Gellner), “근대화와 민족주의,” 백낙청 역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pp. 131–35 참조.

3) 한스 콘(Hans Kohn), “민족주의의 개념,” 위의 책, pp. 18–20.

리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주의의 원초적 材質이 정치적 素材로 처음 탈바꿈한 곳은 서유럽이었고, 그 중요한 계기는 16세기 이래 본격화된 근대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때 까지 인류는 부락, 부족, 도시국가, 神政, 왕국, 그리고 제국 등 다양한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다시 말해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정치적 일체감(identity)의 일차적인 대상은 오늘날의 근대국가 형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1500년경 서유럽의 경우만 하더라도 500여개의 비교적 독립적인 大小間의 정치적 단위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400여년이 지난 20세기 초, 이들은 25개 정도의 근대국가로 정리되었으며, 이들을 우리는 민족국가(nation-state) 혹은 국민국가(national state)라고 부른다.⁴⁾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민족주의도 빌어하였다. 그리하여 국가는 민족에 선행하여 민족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근대 국민국가를 만든 주역은 누구였나? 일반적으로 근대국가의 뿌리는 로마제국이 붕괴하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시기에 생겨났던 一群의 레그눔(regnum), 곧 王國 혹은 王家로 알려진다.⁵⁾ 이 레그눔은 인종적 단위도, 문화적 단위도, 그리고 지리적 단위도 아니었으며, 국가라고 이름 붙이기가 성급한 정치적 단위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왕권 중심적인 것으로서 개인적 충성의 강조와 함께 공권력의 사취가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레그눔은 따라서 체계적인 정치공동체라기 보다는 무정형한 정치세력이었다. 전쟁 등의 이유로 인해 레그눔의 대부분은 短命으로

4) Charles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C.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5), pp. 3-83; 전상인, "틸리의 국가건설 비교연구,"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서울: 열음사, 1992), pp. 97-119 참조할 것. 염밀하게 따지면 民族國家와 國民國家는 다르다. 전자는 국민들이 언어적, 종교적, 그리고 상징적 일체감을 강하게 공유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 정도가 약하다. 보기로 스웨덴이나 아일랜드는 전형적인 민족국가이나, 중국의 경우는 그렇치가 않다.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Cambridge: Basil Blackwell, 1990), pp. 2-3 볼 것.

5) 崔甲壽,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제36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논문(1993.5.21-22, 한양대학교), pp. 9-26.

로 끝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았고, 비록 속도는 지극히 느렸지만 지속적인 정치적 일체감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국가건설 혹은 민족형성의 빗장을 처음으로 열었던 세력은 레그눔의 君主들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의도적인 행위로 보아서는 안된다. 근대국가의 건설을 통해 민족을 형성하려는 고의적인 기도는 적어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적 질서의 회복과 유지, 공평한 사법권의 행사, 그리고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 등 통치에 당장 필요한 실제적인 고려가 우연히 초래한 일에 불과하였다. 1300년 경에 이르러 레그눔에 바탕을 둔 왕권은 유럽사회에서 대외적 주권을 관례로 확립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국가형성의 한가지 기본 작업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대내적 주권의 확립은 아직 시기상조였다. 당시만 해도 군주권은 봉건제후, 도시의 신종 부르조아, 그리고 카톨릭 교회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⁶⁾

그러다가 13세기 말부터 중세의 봉건제적 정치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들은 서로 타협하여 이른바 身分制 國家(Ständestaat, state of estate)를 형성하였다.⁷⁾ 군주의 정당한 지배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莊園과 도시, 그리고 교회의 자율적인 영역이 존중되었던 신분제 국가는 법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領土의 개념도 크게 강화함으로써 근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러나 신분제 국가에 있어서 군주의 통치권은 비록 ‘정당한’ 것이기는 했지만 결코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신분제 국가는 군주와 제후간에 이루어진 지배동맹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일원적이라기 보다는 이원적이었고, 또한 13~4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신분제 의회로부터 충분히 자율적이지도 못했다. 신분제 국가가 더욱 발전하여 대내적인 주권을 공고화하는 일은 16세기 이후의 역사

6) Daniel Chirot, *Social Change in the Modern Era*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6), p. 17.

7) Kenneth Dyson, *The State Tradition in Western Europe: A Study of an Idea and Institution* (Oxford: Martin Robertson, 1980), pp. 25~8; Gianfranco Poggi,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A Sociological Introduction*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8), pp. 36~59; Chirot, *Social Change in the Modern Era*, pp. 17~9 참조.

가 지켜보았다.

이제 우리는 국가형성의 또 다른 측면, 즉 대내적 주권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 하필 1500년 이후 서유럽이었으며, 왜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로 귀결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서유럽에서는 국민국가의 대안적 형태, 예컨대 연방이나 제국, 카톨릭 신정연합, 비정치적 상업 공동체, 혹은 기존의 봉건제 등이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제국이나 몇개 패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가적인 상업복합체는 근대국가의 건설과 한동안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大勢는 君主로 대표되는 국민국가 건설자들에게 기울어졌다. 그 깊은 당시 세계사적 차원에서 서유럽사회가 당시 갖고 있던 사회구조적 특질과 함께, 군주들이 대안적 국가모델의 지배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향유하고 있던 몇 가지 요인들에서 발견된다.⁸⁾

16세기 초 서유럽은 과거 로마제국의 통치를 공유한데 따른 문화적 동질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언어, 법, 종교, 행정관리, 농업방식, 가족제도 등은 전유럽을 수렴시키고 있었으며, 무역을 통한 상호접촉, 지속적인 인구이동, 왕가들 사이에 빈번했던 通婚 역시 유럽인들의 생활 스타일을 매우 유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국가와 같은 통치모델의 전파나 국가를 단위로 한 영토의 획정 및 변경이 무난하였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데로 전형적인 농업사회였던 유럽에서는 신분적 특권을 소유한 지주계급이 광범위하게 공고화되어 있었고 도시지역에서는 부르조아계급이 商人이나 기업가, 혹은 錢主로서 그 세력을 배양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주들이 통치력의 확보를 위해 징세나 징집, 혹은 徵發의 문제를 놓고서 기존 내지 신흥 지배계급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거나 서로 갈등을 벌이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절박한 일이었다. 끝으로 당시 서유럽사회는 분권화된 정치구조를 갖고 있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중국이 단일한 혹은 패권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음에 비해 서유럽은 비교적 작고 약한 수많은 정치적 단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유

8)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Chirot, *Social Change in the Modern Era*, pp. 12–27; 전상인, “틸리의 국가건설 비교연구” 참조.

럽에서 정치·군사적 갈등이 빈발할 소지를 높였다. 그 결과는 결합과 복속, 정복 및 공고화 등의 과정을 통하여 분권화된 여러 정치적 단위들이 合縱連衡을 거듭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근대국가 건설을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들과 함께, 16세기 이후 유럽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근대국가 건설의 주역으로서 활약한 君主들은 다른 경쟁세력에 비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첫째, 중세 이후 군주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부단히 발달시켜온 전문화된 행정조직이다. 국가건설의 문제 가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정치·사회세력들을 견제, 회유, 제압, 정복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료제, 國庫와 재정의 운용, 그리고 법률가의 이용 등 통치 노하우를 그동안 축적해온 군주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둘째는 유럽의 주변 환경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유럽은 다른 제국들의 침략이나 압박을 배제하고 있어서 군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근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地理上의 發見’은 해외로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하거나 국가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초기 자본주의의 발달도 궁극적으로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군주들을 도왔다. 근대국가의 등장으로 부터 독자적인 기원을 가진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이 당시만 해도 선택 가능한 몇개의 국가형태를 놓고 망설이는 중이었다. 그러나 무역 및 상공업의 발달은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전통적 신분적 속박으로 부터 점차 해방시키고 租稅源을 증대시킴으로써 君主들의 호주머니를 불렸을 뿐만 아니라, 부르조아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권위가 등장하는 과정을 부추겼던 것이다.

물론 근대국가의 건설대열에 참가한 모든 정치적 단위들이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성취하는 속도가 균일했던 것도 아니다.⁹⁾ 그것은 국가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王家 血統의 지속적인 공급, 토착 귀족계급과의 관계 여하 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9)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pp. 38–46.

서도, 전쟁에서의 승리가 국가건설 성과를 가늠한 최대의 갈림길이었다. 또한 전쟁의 준비나 대비는 조세나 징병 및 징발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면서 그들의 저항을 자초했지만, 자원 추출을 위한 그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내적인 반대세력을 제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국가건설을 위한 일련의 기본적인 과제들 — 영토의 확정, 중앙집권화, 국가조직의 형식적 자율성의 확보, 통계 및 재무기구의 발달,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 — 까지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을 털리는 “戰爭이 국가를 만들고 國家가 전쟁을 만들었다”라는 말로 요약하였다.¹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6—7세기에 걸쳐 근대국가는 절대왕정 혹은 절대군주제의 성립을 통해 無敵의 세력으로 자라났고 마침내 대내적 主權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¹¹⁾ 절대주의의 핵심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언명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국가, 그것은 곧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국가와 왕권을 동일시하면서 王權神授說로 군주의 정치적 권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절대군주제는 신분제 국가의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사회적 신분을 대변한다고 자처하였고, 실제로 절대왕정의 통합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절대주의의 등장으로 기존의 특권계급은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가의 수취구조에 편승하였고, 신흥 부르조아계급도 무역과 상공업 활동의 보장을 얻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근대 통일국가의 성립을 환영하였다. 주민의 절대적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 역시 절대국가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조세원의 안정적 유지라는 차원에서 군주가 농민을 특권계급으로부터 보호했기 때문이다.¹²⁾

그러나 절대주의 국가는 아직도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의 以前 단계에

10) 보다 분석적인 내용은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Pete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5), pp. 169—91 참조.

11)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Cambridge: Polity Press, 1985), pp. 83—121; Poggi,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pp. 60—85 볼 것.

12) 최갑수,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pp. 15—6.

머물러 있었다. 근대국가가 민족형성의 기본틀로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은 절대왕정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점점 더 부르조아적인 것으로 되어가는 동안 바로 그 군주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대두함으로써 탄생했다고 보아야 한다.¹³⁾ 곧, 민족주의는 군주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집단적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代議體를 설정하기 위해 정치적 주권을 재정립하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주도세력 가운데 하나는 물론 부르조아로서, 이들이 ‘국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다양하고 상반된 여러 사회·경제적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고무하는 과정에서 민족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결국 민족형성은 절대주의 국가의 등장과 그것의 해체과정에서, 아이러니칼하게도 군주권과 그 도전세력의 노력이 서로 합쳐져 이루어진 결과였다.

민족국가 대열의 선두주자 영국에서는 군주제에 입헌제적인 제약을 가하고 신분제 사회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여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萬人이 법 앞에서 평등한 정치공동체, 곧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이 비교적 순조로웠다. 절대주의 왕권과 특권계급에 대한 투쟁은 청교도혁명(1642–49년)과 명예혁명(1688–89년)을 거쳐 입헌군주제의 등장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그후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 없이 민족국가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다. 조용했던 영국혁명은 역설적이게도 민족주의 운동에 관한 한 영국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대적 정치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00년 뒤에 발생한 프랑스혁명(1789년)이었고, 프랑스는 민족주의 운동의 本山이 되었다.

영국에서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 들어와서도 절대왕정과 신분귀족이 구체제(ancien régime)를 완강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이은 對外 戰爭으로 국가재정이 궁핍하게 되자 루이 16세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던 三府會를 소집하였는데 이것이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혁명의 前夜는 부르봉 절대왕권이 특권귀족계급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이고자 하는데 대한 후자의 반발이었지만, 혁명의 주역은 곧 신흥 부르조아계급, 특히

13) 위의 글, p. 16.

농민으로 바뀌었다. 당시 프랑스 농민들의 반란능력은 매우 높았던 편으로서, 이는 프랑스혁명이 후일 소위 社會革命(social revolution)으로 불리워질 수는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¹⁴⁾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근대적 정치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혁명적인 정치적 제휴를 통해서였다. 프랑스혁명은 역사상 최초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이 왕권신수설이라는 초자연적인 개념이나 전통에 있다는 것을 배격하고, 인권선언을 통하여 인간의 평등함과 아울러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기하는 실로 획기적인 이념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프랑스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은 그 뒤 恐怖政治 시대나 테르미도르의 반동(1794년)에 의해 일시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민족국가를 향한 프랑스 역사의 발걸음은 후퇴하지 않았다. 입헌군주제 헌법의 채택, 보통선거의 실시 및 공화제 선포, 국기와 국가 및 革命曆 제정, 봉건적 貢納의 폐지, 미터법 채용, 징병제에 의한 국민상비군의 편성, 카톨릭의 억제와 理性崇拜 정책 등은 민족형성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인 바, 프랑스혁명 직후 프랑스인은 ‘갑자기’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동일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민족을 만든 전형적인 예로 남아있는 프랑스혁명이 민족을 단위로 한 독립적인 주권국가 수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재삼 강조될 필요가 있고, 덧붙여 말하자면 프랑스는 현대 국가구조의 典範을 자랑하게 되었다.¹⁵⁾

프랑스혁명 끝에 등장한 나폴레옹 시대는 비록 궁극적으로 군사독재체제 및 帝政으로 귀결되기는 했지만, 민족국가 건설에 있어서는 가일층 박차가 가해진 때였다. 최초의 ‘대중적 독재자’ 나폴레옹은¹⁶⁾ 혁명적 소요를 무력으로 진압시키는 이면에, 근대 民法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나폴레

14)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pp. 118–21.

15) Bertrand Badie and Pierre Birnbaum(trans. by Arthur Goldhammer), *The Sociology of the State*(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3), pp. 105–15;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pp. 196–205.

16) E. H. 카(Carr), “민족주의의 세 단계,”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p. 54.

옹 法典을 1804년에 반포하여 개인의 자유, 법 앞에서의 만인평등, 그리고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제정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더욱 중앙집권화되고 전문화된 관료제 국가의 형성, 상비군 제도의 발전, 국립은행의 설치와 국민교육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국민국가의 內實을 다짐으로써 민족주의를 더욱 고양시켰다. 민족주의 발달에 대한 나폴레옹의 기여는 그러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족주의의 최고 傳道師였다.¹⁷⁾ 나폴레옹 전쟁은 인근 국가들에게 민족주의 이념을 직접 전파하기도 하고 그들의 민족주의를 고무 자극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은 민족주의 시대의 도래를 不可逆的인 것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또한 프랑스혁명이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특권귀족계급을 소멸시키는 대신 대다수 농민들을 신분적으로 해방시켜 국민정치(national politics)의 場에 흡수한 것은 민족주의에 대해 민주적 혹은 民衆的 차원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의 발달이 본격화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계급적 구분이 미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면, 프랑스혁명 이후의 시민적 평등을 허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매도하는 일은 선부른 추론이다.¹⁸⁾ 스카치풀이 강조하듯이 프랑스혁명을 부르조아혁명으로만 볼 수 없다.¹⁹⁾ 결국 프랑스 혁명 이후 민족은 전제주의와 특권의 배척임과 동시에 국민주권과 자치의 구현체가 되었다. 이제 민족은 유럽인들의 정치·사회적인 열망을 담아내는 유일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민족주의 원리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피할 수 없는 바람[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민주주의 혹은 민중주의를 원리적으로 지향했던 민족주의가 그 이후 국민통합의 도구로 명실상부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17) E. H. 카 (Carr), “민족주의의 세 단계,” p. 54.

18) 최갑수,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p. 20.

19)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pp. 178–9 볼 것. 오히려 프랑스 자본주의의 발달은 인과적으로 볼 때 나폴레옹에 의해 ‘완성’된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결과, 곧 민족국가 건설에 그 바탕을 둔 것이었다.

었다. 그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영역의 ‘과대성장’과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계급대립의 심화 때문이었다. 국가와 부르조아계급이 초기의 민족주의 운동을 선도하면서 민족범주의 통합성을 불완전해졌다. 우선 민족주의의 물결속에서도 국가엘리트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구성원, 특히 피지배계급에 대하여 민주적 권리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었다.²⁰⁾ 또한 “부르조아 없는 민주주의는 없었다”라는 무어의 주장은²¹⁾ 절대왕정과 특권 귀족계급으로부터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신홍 부르조아계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옳으나, 그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선거권을 피지배 계급에게 확대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사실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2월봉기(1848년)와 파리꼬뮌(1871년)은 민족주의 운동의 정치·사회적 통합 능력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들이었다.

실제적으로 지난 200여년 동안 산업화라는 시대적 대세속에서 민족주의는 貞節을 지키지 못한 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同寢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족주의의 不可逆性과 이념적 유연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민족주의가 너무나 자명한 근대적 정치이념이 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副次的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대두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민족국가의 성격 역시 자본주의 국가로 변해갔다. 代案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 문제 앞에서 오랫동안 방황했다. 그러나 “만국의 노동자여 團結하라”는 막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범주가 민족의 카테고리를 끝내 깨트리지는 못했다. 20세기 유럽 정치사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이 보통선거권을 쟁취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한 것은 분명히 자본가계급에 대한 戰爭의 산물이었다.²²⁾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민족에 대한

20) Dietrich Rueschemeyer, Evelyne Huber Stephens & John D. Stephens,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2), pp. 66–7.

21)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p. 418.

22) Goran Therborn, “The Rule of Capital and the Rise of Democracy,” *New Left Review* 103:3–41 (1977).

계급의 마지막 投降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對抗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는 막스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 등 가장 산업화의 수준이 낮았던 나라들에서 시도되었다. 후일 現存사회주의라고 불리게 된 이들은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배격하면서 계급문제의 해결을 國際主義 보다는 國家主義를 통해 모색했다. 그리하여 현존사회주의 역시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²³⁾ 국제공산주의가 아닌 一國공산주의, 국가의 소멸이 아닌 국가의 강화, 그리고 무산자계급의 정치적參與가 아니라 정치적 動員으로 귀결된 현존사회주의 체제는 결국 민족국가의 또 다른 형태를 선보이는 것에 그쳤던 것이다. 아울러 그들의 민족주의는 산업화나 민주화에 있어서 부르조아 민족주의에게 패배한 것으로 최근의 역사는 심판했다. 더욱이 현존사회주의의 집단적 몰락 이후 나타난 민족주의熱風은 그곳에서 조차 계급적 범주가 민족적 카테고리를 결코 압도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적절히 반증해 준다.²⁴⁾

III. 民族主義와 世界體系

민족주의의 역사는 유럽 몇 나라들에서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대내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초기의 민족국가들은 이른바 국가간 체계(interstate system)를 형성한 다음,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지정학적 세계체계를 일반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은 처음부터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world-economy)를 주조해나갔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도 국제관계의 중심적인 단위는 여전히 민족국가였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의 波高는 정치·군사적 차원의 세계국가체계와 경

23) J. H. 카우츠키(Kautsky), “공산주의의 민족주의화,” 차기벽 (편), 「민족주의」(서울: 종로서적, 1983), pp. 252–85.

24) 임지현, “동유럽 민족운동의 구조와 논리,” 제36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논문(1993.5. 21–22, 한양대학교), pp. 27–67.

제적 차원의 세계경제체제를 동시에 형성한 것이다. 이를 두가지 세계체계는 지난 200년 동안 더러는 평행하고 가끔은 중복되면서 세계사의 밀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세계화 과정을 진화론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의 바탕은 富(plenty)와 힘(power)의 논리로서, 強者 끼리의 밥그릇 싸움과 弱肉強食,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과 도전이 주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근대국가가 유럽의 이곳 저곳에서 그 형태를 차츰 갖추어가는 동안, 그들을 위주로 하여 국가간 체계가 새롭게 結晶化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한동전의 兩面 처럼 나타났다. 그것의 기원은 절대주의 왕정국가들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아가 그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베스트 팔렌 조약(1648년)이었다.²⁵⁾ 베스트팔렌 조약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와 같은 국가간의 협정은 보통 전쟁의 끝에서 만들어졌다. 그 까닭은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간 체계의 결정요인으로서의 국제 조약은 일종의 ‘멤버쉽 클럽’(membership club) 같은 것이었다. 곧, 기존의 멤버國家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배타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국가 건설의 후발주자들은 선두그룹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국가가 태동하는 과정도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지정학적 국가체계의 결정화는 그후 계속되었다. 1815년에 소집된 비엔나회의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에 의해 형틀어진 유럽 사태를 수습하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억압하여 보수 반동체제를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을 지배한 비엔나體制 역시 勢力均衡(balance of power)主義에 입각한 것으로, 국가간 체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1848년에 비엔나體制가 붕괴되면서 다시 일기 시작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물결은 1989년 말의 동유럽 사태에 비유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²⁶⁾ 그 이후 민족주의는 유럽내에서 더 이상의 反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5)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pp. 45–6.

26) Michael Mandelbaum, “In Europe, History Repeats Itself,” *Time*, 1989.12.25.

세계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유럽產 민족국가는 ‘모방’(imitation) 혹은 ‘강요’(imposition)의 방식을 통하여 유럽 바깥 지역으로 전파 이식되었던 것이다.²⁷⁾ 그러나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 운동의 高潮는 세계전쟁으로 나타났다. 베르사이유 조약(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오늘날 국가간 체계의 기본틀을 확정지었다. 아울러 1920년에 탄생한 국제연맹은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민족국가 단위의 세계국가체제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지정학적 세계체계의 중심은 脫유럽화를 모색했다. 그것의 계기는 세계자본주의 중심이 대서양을 횡단한 일과 러시아가 소련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과 국가사회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립은 그러나 곧바로 가시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파시즘과 나치즘이라는 공동의 敵 앞에서 잠정적 공존을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마자 미국과 소련은 적대관계로 돌아섰고, 1945년 이후 세계국가체계는 동서 냉전논리에 의해 규율받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국가의 숫자는 특히 후일 제3세계라고 命名된 지역에서 폭발했다. 식민지 등 민족국가 이전의 상태에 있었던 제3세계 지역은 민족국가의 수립을 시대적 급선무로 받아들였고, 냉전체제의 형성과 맞물려 있었던 그곳에서의 국가건설은 보다 ‘강제집약적’인 것이 특징이었다.²⁸⁾ 결과적으로 제3세계에서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일은 훨씬 빠르고 容易하였다. 한편, 1946년에 탄생한 국제연합은 전후 세계의 거의 모든 민족국가를 망라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했다. 사실상 국제연합은 국가자격의 공인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이 売據했던 동서냉전 구도는 그러나 20세기의 끝을 보지 못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현존사회주의 체제는 1980년대 말 이후 집단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제3세계의 語源的 의미도 덩달아 퇴색하였다. 탈냉전 혹은 冷戰 以後라고 불리는 작금의 국가간 세계체계는 미국을 단일 霸權國家로 가

27) Badie and Birnbaum, *The Sociology of the State*, pp. 93–101.

28)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pp. 197–225.

진 가운데 과거 제2세계 지역으로 부터 민족국가의 숫자가 새롭게 추가되는 시점에 놓여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세계체제 대변혁이 차지하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완성’에 있다. 오늘날 인류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부르조아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²⁹⁾ 돌이켜 보면 이른바 ‘긴 16세기’(1450–1640년) 이후 국제경제의 형식을 띠게 된 자본주의는 마침내 전세계를 국제적 분업체계로 개편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비켜갈 수 없는 문제는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이다.

월러스타인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대두와 민족국가의 형성 사이에는 내부적 연결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³⁰⁾ 그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등장을 설명하면서 유럽을 핵심부, 주변부, 그리고半주변부의 3가지 계층지역으로 나눈 다음, 핵심부에서 출현했던 절대주의 국가에 주목한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체계 안에서의 강력한 국가의 창출이 민족주의가 등장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선결요건이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핵심부 지역의 신흥 부르조아계급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고 중대하기 위해 강력한 국민 국가의 출현을 지원하고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핵심부 지역은 강력한 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부와 半주변부를 경제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서유럽에서 처음 발원할 당시, 국제적 분업구조내에서 핵심부에 위치할수록 강력한 민족국가 형성의 속도도 빨랐다는 월러스타인의 가정에 경험적으로 瑕疵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틸리와 스카치풀, 그리고 힌츠 등이 월러스타인式 세계체제론의 경제환원주

29) Bruce Cumings, “Illusion, Critique, and Responsibility: The *(Revolution of '89) in West and East*,”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The Revolution of 1989*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91), p. 111.

30)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의를 배격하는 대신 군사·지정학적 차원의 세계체계를 별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³¹⁾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월러스타인의 세계체계론에서, 과거의 世界帝國(world-empire)이나 그 자신이 미래의 희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世界政府(world-government)와는 달리,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민족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多衆的인 정치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17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북서부 지역을 중심부로, 남부 지역을 반주변부로, 그리고 동부 지역을 주변부로 區劃化하면서 자본주의 '유럽'체제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지향이었다.

핵심부 지역에서의 '발전'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자본주의의 국제적 팽창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세계체계론이라면, 주변부 지역의 '低發展'(underdevelopment)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대를 분석하는 것은 그것의 사촌격인 從屬理論이다. 종속이론에 의하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주변부 지역의 低發展은, 근대화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未發展' 상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유럽 등 자본주의 핵심부 지역의 發展과 역사적으로 동일한 과정의 산물이었다.³²⁾ 다시 말해 자본주의 세계체계내 중추부의 발전이 진전되면 될수록, 위성부에서는 오히려 저발전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발전과 저발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자본주의의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지역간에 不等價 交換法則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前者は 세계적 규모의 資本蓄積을 할 수 있었다.³³⁾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부 지역의 민족국가는 제국주의로 강화된 반

31)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pp. 44–5; Theda Skocpol, "Wallerstein's World Capitalist System: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1075–90(1977); Otto Hintz (ed. by F. Gilbert),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5).

32) Andre Gunder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7) 참조.

33) Samir Amin, *Unequal Development: An Essay on the Social Formation of Peripheral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참조.

면, 주변부 지역은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가운데 민족국가의 태동은 억제 내지 지연되었다.

자본주의의 국제화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민족주의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소위 ‘新民族主義’(new nationalism)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주변부 지역에서 출현한 反帝國主義的, 反植民主義的 운동으로서, 저항적이고 부정적 내용과 함께 知識人이 선도한 것이 특징이었다.³⁴⁾ 서유럽에서 출현한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와 친화력을 가졌던 반면, 제3세계의 민족주의 운동은 세계자본주의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 자주국가의 수립을 염원하였다. 그 결과 제3세계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쉽게 결합했던 일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계기로 하여 제3세계 지역은 자본주의 세계체계로 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민족국가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했다. 민족국가 이외의 정치적 권위는 심각한 고려사항이 되지 못했다.

전후에 제3세계 지역에서 탄생한 민족국가의 대부분은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소위 ‘신식민주의’는 제3세계 국가들의 구조와 성격을 자본주의적 국제노동 분업구조내 劣等한 위치에 고정시킴으로써, 민족국가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적 저발전 상태는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분업구조상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위치가 발전과 저발전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新從屬理論 혹은 종속발전론이 주장하듯이, 위계적인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편제하에서도 개별국가의 수직적 위치 이동이 목격되기도 한 것이다.³⁵⁾ 그리고 이 때 관건이 된 변수는 국내자본과 노동 그리고 해외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자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었던 제3세계 일부 국가들의 능력이었다.

34) J. H. 카우츠키, “저개발국의 민족주의,” 차기벽 (편), 「민족주의」, pp. 130–57; 톰 네언(Tom Nairn), “민족주의의 양면성,”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pp. 220–61 참조.

35) 대표적으로 Peter Evans,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9) 볼 것.

한편, 자본주의는 최근까지도 세계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데는 실패했다. 소련을 비롯한 현존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의도적 단절을 통해 ‘자주적 발전’을 모색했다. 소위 離脫的 國家社會主義(*dissoziativ-staatsozialistische*) 發展은 사회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계로 부터 벗어난 민족국가들에서 주로 발견되었다.³⁶⁾ 산업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암도적으로 강조된 자주적 발전경로는 초기의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점을 노정했다. 그러나 체제 내부적인 요인이 그 까닭의 전부는 아니었다. 현존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 자본주의체제로 부터 부단없는 壓迫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 의해 사회주의적 발전 경로를 제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 당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1980년대 말부터 이를 현존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부터 깃발을 내리기 시작하였고, 그 빈 자리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차지가 되었다. 아울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과거 제2세계 지역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IV. 結論

지금까지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유럽에서 근대적 국민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탄생했던 민족주의는 가장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정치단위로서의 위치를 계속 공고화해왔다. 일찌기 지역이나 인종, 문화, 종교 등의 ‘원초적’ 재료를 민족이라는 그릇속에 정치적으로 용해하는 일에 성공한 민족국가는 그 후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계급 範疇의 의미 강화와 자본주의의 세계체계화 추세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더욱이 민족국가는 국가간 체계를 이루며 국제관계에 있

36) Dieter Senghaas, *Von Europa lernen* (한상진 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0), pp. 76–7, 209–54.

어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단위로 정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수세기의 세계사를 민족주의의 시대 혹은 민족국가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하등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물론 작금에 脫民族主義 시대의 단초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점차 超國家的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생산 및 시장관계의 국제화, 경제단위의 블럭화, 다국적 기업 및 국제경제기구의 역할 증대는 1980년대 말에 시작된 세계체계의 대변혁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의 범위가 더욱 축소되어 인종 내지 지역이 정치적 주권의 새로운 중심이 되려는 경향도 대두하고 있다. 최근 유고 等 세계 도처에서 內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결과이다. 한편, 헌팅تون은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있어서 국가간의 갈등보다는 문명 혹은 문화간의 충돌이 향후 국제관계를 지배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³⁷⁾ 아울러 대내적인 차원에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국가영역의 비중을 점차 위협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특히 포스트 맑시즘에 입각한 작금의 시민사회는 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평화, 여성, 반핵, 반문화 등 사회의 각 부문에서 同時多發적으로 벌어지는 소위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의 공간이라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민족주의가 종지부를 쉽게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경제관계의 국제화 추세 강화와 문명간의 갈등,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가 국가와 세계체계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변화’시킬지는 모르지만, 민족국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기에는 오랫동안 力不足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혹은 국가엘리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구체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역사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특히 국가가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과 민주주의의 언술(discourse)을 통한 지배의 정당성 확보는 국가

37)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72(3): 22–49(Summer, 1993).

38) 김호기, “포스트 맑스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14:116–43(1992 여름) 참조.

를 중심으로 삼거나 그것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갈등이 처리되는 방식을 계속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더군다나 민족주의가 역사적으로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감정들을 이용하여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³⁹⁾ 민족국가의 ‘자연스러운’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발상은 민족주의 이후를 예단하는 의미로서 보다는, 민족국가의 부정적 이거나 미흡한 요소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39) 한스 콘, “민족주의의 개념,” p. 18.